

옛 광주교도소 국가 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해야

5·18 때 시민 학살·암매장 사적지...역사 체험·전시·교육 공간으로
기재부 반대로 선도사업 제외된 사업...광주시, 국가사업 다시 추진

광주시는 장기 표류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현안을 국가 사업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약속한 5·18 대표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에 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부지 국가 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 일대에 주둔, 지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학살의 장소다.

또 계엄군은 시민들을 이 곳으로 불잡아와 고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인근에 가·암매장 됐고, 이후 이 일대는 암매장지로 항상 지목돼 왔다.

광주시는 이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아 해당 부지에 5·18 역사 체험·전시, 국제 인권도시 교류·교육 공간 등을 만들고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광주교도소 이전 이후 2019년부터 법무부의 '솔로몬로파크'를 짓던 도중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유골을 발견하면서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 곳이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가 암매장 관련 추가 발굴까지 진행되면서 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선도사업지로 지정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교도소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당초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해당 부지를 선도사

업지로 지정하고 민간 개발 형태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5·18 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면서 사업이 미뤄졌다. 5·18 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만큼 사적지를 훼손하고 수익성이 짙은 아파트 건립 사업보다는 5·18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당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고, 기재부에 선도사업을 취소하고 국가 주도 원형 보존 사업으로 추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주 교정시설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가 다른 국유재산 선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회 요청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다시 해당부지에 대해 선도사업 제외와 행정안전부 주도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 측에서는 '명분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재부 국유재산 선도사업 취소후 행안부와 추진중인 국가주도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지에 '국회 광주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과 연계해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한국도서관협회(협회)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미국 언론, 이재명 후보 행보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관세, 안보,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12·3 계엄 때 ‘국회로 와 달라’ 라이브 방송 5·18 때 역사의 트라우마가 나를 일깨웠다”

이재명 후보, 오늘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5·18정신의 헌법수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12·3 비상계엄 후 국회로 빠르게 이동한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23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4일 5·18민주운동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를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를 듣고 차를 타고 국회로 향하면서 '이재명TV' 라이브(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도 당시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달됐다.

당시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7만명

(현재 126만명)이지만, 이 영상 조회수는 240만회를 기록했다.

이후 이 후보는 당시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역사의 트라우마'가 당시 나를 일깨워 긴급 생방송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가 말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 후보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어떻게 막겠는가"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야 내가 체포되더라도 국민들이 내가 잡혀가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지역민도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17 비상계엄과 너무나 닮아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엄군 동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수감 시도, 장갑차 및 헬기 동원, 소총 등 화기와 실탄 휴대 등 1980년 광주를 짓밟은 5·18 당시와 무척 흡사했다는 것이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이 후보가 국회로 달려간 모습이 1980년 5월 27일 죽음을 각오하고 옛

전남도청으로 달려간 시민군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 후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역대 정부와 달리 오월에 대한 약속을 실천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뿐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이 후보의 향후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 타임지가 이 후보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다.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이 후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세판단에 빠른 타임지의 선정이 '여대명' (아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에 힘을 싣고 있다.

타임지는 이 후보에 대해 어린시절 공장에서 일하고, 정치인이 된 후에는 흥기 피습을 당한 점, 최근에는 계엄 사태를 겪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극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역대 국내 정치인 중 해당 순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세 대통령 모두 재임 기간에 이름을 올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대선 경선 후보들 'TV토론' 개헌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인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23일 두 번째 TV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후보들 간 차별점을 드러내는 등 각 정책 이슈와 관련한 후보들의 선명성이 비교적 잘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헌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됐다.

김동연 후보는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는 견해를 달리 했다.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내란 동거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두고는 "이런 개헌안이 확정되면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거리를 뒀다.

/연합뉴스



최정인 작가의 방

자연과
아이들

2025. 4. 12.-6. 30.

이야기꽃도서관

3층 작가실

※ 도슨트 예약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
문의 062-960-6814

